

# “익산 선거구획정안 전면 폐기하라”

### 혁신당 도당, “헌재 강조 표의등가성·평등선거 원칙 훼손한 제도적 문제 출마자 유불리 넘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선거운동 전면 중단” 초강수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익산지역 정치인들이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운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 소속 임형택 익산시당 후보와 시의원 출마자 등 8명은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지역 정치 독점과 유권자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획정안은 한법재판소가 강조해 온 표의 등가성과 평등선거 원칙을 훼손한 제도적 문제”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특정 정당

의 이해에 맞춰 설계된 정치적 획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출마자의 유불리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익산 시민 한 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소수 야

당 의견 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견 청취는 있었지만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변칙적 용역행위였다”며 “복소조항이 포함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기록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취지가 훼손됐다는 점도 주요 비판 대상이다. 조국혁신당 측은 “청년 정치인의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할 개혁 방향과 달리, 기존 선거구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표성이 약화됐다”며 “선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획정이 변경돼 사실상 ‘깜깜이 선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지속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도려내기식 선거구 조정은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결과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요구를 내놨다. 이들은 “이번 획정안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 정당의 의식 유지 수단인지 숙고해야 한다”며 “최종 의결 과정에서 이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일당 독점 정치의 오만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오는 28일까지 도의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구획정안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당 후보와 시의원 출마자 등 8명은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지역 정치 독점과 유권자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제명 처분 입장 정리 중 다음 주까지 밝히겠다”

###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윤리감찰단 처리 과정, 형평성 등서 문제 지적도 제기 일부서는 무소속 출마 권유 목소리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제명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 중이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도민들께서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윤리감찰단의 처리 과정이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들의 판단과 참여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은 자신 스스로를 돌이키는 성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초 4월 말, 구체적으로는 30일께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특검팀 조사 문제로 부득이하게 결정을 미루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도민들께 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호영 국회의원이 재검찰을 요구하며 12일간 단식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도민들 사이에서 의구심과 분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출마준비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청년당원과 의민한 후 대리가치비를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1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감찰 후 12시간만에 전격 제명된 바 있다. /1만호 기자

# “현 완주군의회 의장을 완주군수 범군민 후보로”

### 완주전주통합반대 대책위 유의식 의장에 공식출마 요청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가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완주군수 범군민 후보로 추대하며 출마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회원 10여 명은 27일 오전 완주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완주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지켜낼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 회원 10여 명은 27일 오전 완주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완주군수 범군민 후보로 추대하며 출마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완주는 통합 논의로 인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자치권이 흔들려 왔다”며 “완주의 미래는 군민의 뜻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통합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의 의장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수 범군민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유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저지의 최전선에서 군민과 함께해 온 인물로 정치적 이해를 넘어 지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다”며 “군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완주군수

된 리더십을 갖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치적 부담보다 완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달라”며 “군민의 절박한 요구에 응달라”고 출마를 촉구했다.

한편 유의식 의장은 이날(27일) 오후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대책위가 여러 후보를 검토한 끝에 자신에게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 제안을 받은 만큼 즉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군민들이 이처럼 내서는 데에는 일정 부분 뜻이 있다고 본다”며 “현 군정에 대한 불만과 기대 부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은 국민이 부르짖어 응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며칠간 충분히 고민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상황은 군민들이 지도자의 결단력 부족과 불안정한 리더십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만호기자·완주=염재복기자

# 시민사회 “전주국제영화제, ‘가자지구 침공’ 작품 상영 철회하라”

### 팔레스타인 연대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촉구

29일 개막하는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다룬 작품이 상영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팔레스타인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7일 “가자지구 홀로코스트에 잔주국제영화제의 사대적 소명을 묻는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영화제 상영 예정작인 ‘헤스!’의 상영 철회를 촉구했다.

관객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전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느냐”고 반문했다.

### 전북선관위, 낙선목적 SNS에 허위사실 공표 선거구민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2026년 4월 중순경,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예비후보자 B씨의 이력 관련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제작하여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만호기자

이들은 입장문에서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스라엘 영화 ‘헤스!’의 국내 첫 상영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전달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 영화

제는 팔레스타인 영화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집단학살의 부정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영화 ‘헤스!’는 이스라엘 제 작사가 제작하고 이스라엘 정부 펀드의 지원을 받고 파리에서 열린 이스라엘 영화제에 출품돼 이스라엘 선전에 이용된 작품”이라며 “감독 역시 자신의 영화를 보고 비판하리라 팔레스타인인이 주장하는 보이콧 운동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스라엘 예술가의 성찰을 위한 재료가 아니며 집단학살 현장은 세트장 따위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영화가 대형 극장에서 걸려 있는 지금 영화제가 생각하는 영화와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며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내부 변화가 가능하다는 비

판론을 펼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저지의 최전선에서 군민과 함께해 온 인물로 정치적 이해를 넘어 지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다”며 “군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완주군수

된 리더십을 갖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치적 부담보다 완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달라”며 “군민의 절박한 요구에 응달라”고 출마를 촉구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 첫발

### 서남이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의료·교육 등 지원 위한 최소 보호 체계 확립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서남이 의원(전주)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회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주 아동들은 의료·보육·교육 등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행정 체계 밖에 머물고 있는 아동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

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공적 확인과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도내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을 확인하고 의료·보육·교육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소한의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적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주 아동의 본인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확인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확인서 발급 ▲이주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1만호 기자

# 신중년 신규 어업인 정착 지원 강화

### 도, ‘만 60세 미만’까지 어촌 정착 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연령을 기존 만 45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해 신(新)중년층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수산업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으로 수산업 경영 기반이 있는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반 확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신규 어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부모와 함께 수산업을 공동 경영하는 경우에는 타 분야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타 분야 유사 지원 수혜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 보유자 재학·휴학 중인 학생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어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전북형 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60세 미만(1966년 1월 1일~

도는 이번 연령 확대를 통해 귀어를 희망하는 신중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98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으며, 어가 가계자금과 수산업 경영비로 활용할 수 있어 창업 초기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어업·양식업 등 3년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